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과 협상전략

**‘쌀·콩 및 쇠고기 등 축산물·과실류’ 농업부문 전체에 부정 영향 줄 것
여타 FTA 체결과 차원 달라, 피해 최소화 위한 ‘협상·선 대책’ 있어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서 높은 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양한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하기 어렵고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활성화 되었다. 2005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중 19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20건이나 되고 있다. 금년 7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일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은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도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감으로 외환위기 후 1998년부터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었고,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 2006년 7월에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발효되었다. 2006년 2월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선언하였으며 6월과 7월에 1차, 2차 협상을 하였고 9월중에 3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입 큰 폭 증가·수출 미미’ 예상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내 피해가 최소화하는 수세적인 FTA를 체결하였다. 한·미 FTA는 이전 3개의 FTA와 달리 2004년 이후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FTA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다.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이 동시다발적이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선진경제권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다. 특히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
계는 미국과의 FTA가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
서도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
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
본적으로 양자협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자협상에 있어서는 국력과 산업
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호주의
에 입각한 협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력의 차이로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전될 것
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에 있어서 미국의 관세가 이미 2% 이하로 낮춰
진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세와 비관
세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서비스산업
에 대한 사전대책과 철저한 준비 없이 FTA가
추진되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
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 및 노동비용
등 생산여건의 어려움 속에 국제경쟁력이 취약
한 상태이다. 미국은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주
요 품목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업부문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농업과 농업생산자들은 지난 우
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결과를 이행하
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액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런데 WTO체제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
유화에 비해 더 큰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동시
다발적 FTA 협정의 추진과 그것도 미국이라는

농업대국과의
FTA 추진은 향후
한국농업에 큰 도
전으로 다가설 것
임에 틀림없다.

한·미 양국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미국의 절

대적인 비교우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
로 수입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양
국 간의 농축산물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의 체
결은 이 같은 교역패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
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공급이 수
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축산물의 수입
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국 간 자유무역협
정의 체결 시에는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로 인
하여 우리가 자급하고 있는 쌀, 식용 콩 등의
기초식량을 포함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등의 축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인 오렌
지, 포도 등 과실류와 과실조제품, 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 유제품 및 이들의 가공/조제품,
양파, 인삼, 꿀 등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
여 농업부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식물검역 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
과, 배, 복숭아, 딸기 등도 현행관세가 45%수
준으로 높은 편인데다 미국산 수출가격이 국내
가격의 30%내외에 불과하여 향후 검역으로 인
한 수입금지가 해제되고 관세가 낮아질 경우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라면,
국수, 과자, 담배 등 가공품위주이다. 일부 제
미교포와 아시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
감귤, 인삼, 버섯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한국의



한 두 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국 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Rogowsky(2004))에서도 향후 양국간 FTA 체결 시 미국이 이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분야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 간 FTA 체결 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 축산물 및 낙농품, 과일류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를 전망하며, FTA 체결 4년 후에는 미국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4억달러(10조4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치즈, 버터, 탈지분유 등 낙농품의 대한국 수출이 9억불, 과일 및 채소가 7천

만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쌀, 콩, 보리 등 곡물류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 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로서 효과적인 협상대책과 국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통’될 듯, 보상 및 소득안정화 방안 시급

한·미 FTA는 한·칠레 FTA와 비교할 수 없는 협상과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한·칠레 FTA, UR협상에 비해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해계층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무시한 채 서둘러 협상을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을 추진하는데 품목별 파급영향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없었고,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선 대책 후 협상’이라는 협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업인들과의 대내협상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국회비준에서 농업인들의 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

한·미 FTA 1차,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초안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농업부문에 있어서 미국은 시중 공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수세적이었다. 미국은 전 품목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였으며, 특별





긴급관세의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수입쿼터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고, 국영무역 배제와 수입부과금 금지를 주장하였다. 농산품에 있어서 공산품 보다 긴 관세 철폐 이행기간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8월 중순 한·미 양국 간에 양허안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3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조속한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한·미 FTA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국과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혹은 장기간 유예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협상의 주체인 정부는 FTA 협상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부문별 이해조정의 능력배양이 중요하다. 한·미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외협상 대책과 동시에 국민과 농민단체들과의 대내협상과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어려운 농업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농업계는 농업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를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국과의 FTA 협상 체결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부문의 생산액감소,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하락이외에 식량자급률 저하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과 미국 간 농업생산비와 가격차가 크고

우리나라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여 국내 생산 감소와 미국산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FTA 체결 이전 미국의 가격경쟁력이 여타 수출경쟁국에 비해 낮아 한국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품목들이 관세장벽 철폐로 수입이 늘어나는 무역전환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한·미간 FTA 체결 이후 과채류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산 농산물이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 칠레 등과의 경합이 예상됨에 따라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의 주요 소득 작목인 쌀, 감귤, 사과,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유제품, 인삼, 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혹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철폐유예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취약 품목과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지원 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여건상 개방화의 가장 취약한 산업이 바로 농업부문이다. 한·미 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대외협상과 동시에 사전적인 국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와 농산물 수출대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농업에 큰 고통과 도전으로 다가설 것이 자명하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하기 전에 철저하고 면밀한 품목별 대책과 더불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방안은 물론 농가소득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Y